



물 부족국가의 물 절약 정책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으며,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필자가 광주광역시 상수원인 동북담과 주암담을 답사해보니 수위가 저 밑바닥에 가까이 있으며 무등산의 약수터 물은 마른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물 절약에 관한 경고를 하지 않으며 시민들도 물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이 있다. 수원지의 물이 있을 때 시민들은 물을 아껴 써야 한다.

역사적으로 현명한 통치자는 치산치수(治山治水) 사업을 잘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통치자는 세종대왕과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에 22조의 예산을 들여 16개 보를 만들어 수자원 확보와 이용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의 물 이용을 못하고 보를 철거한다는 공문을 하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은 물 부족 국가의 대책에 관심이 없다.

필자는 물 부족이 심한 호도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빗물을 물탱크에 모아 아껴 쓰고 한번 쓴 물은 다시 여과해서 다시 쓰는 것을 보고 물 절약에 관한 관심을 품고 일상생활에서 적은 물이라도 아껴 쓰고 있으며 물을 쓸 때는 필요한 양만큼 쓴다는 원칙을 정해 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산림녹화(山林綠化) 사업을 하여 수자원을 보호했으며, 전국 여러 곳에 댐을 만들어 물을 저장했으며, 전천후(全天候) 농장을 만들기 위해 관정을 파고 용수로를 개척했다. 그 덕택으로 우리나라는 한해(旱害)를 입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었다.

물 부족은 농업용수도 중요하나 식수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 해마다 갈수기(渴水期)가 되면 물 운반차가 물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물 절약에 대한 경종을 주고 있다. 가정에서 식수인 수도물을 많이 소비하는 곳을 주방과 화장실이다.

주방에서의 물 절약은 하고 있으나 화장실의 양변기 물통에서 한 번에 배출하는 물량을 줄이면서 배설물을 처리하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물 절약을 위해 화장실 양변기 물통에 벽돌 한 장씩 넣어서 벽돌 한 장 만큼의 물을 절약하게 했다. 실제로 온 가정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양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 물 절약을 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지나고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민주 정치체제가 되면서 저축 교육이 없어졌으며, 물 절약에 관심은 없고,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 석유 소비를 많이 하고 있으며, 주거문화가 아파트가 되면서 양변기 화장실이 많아졌으나 화장실의 양변기 물 절약에 관심이 없는데 광주광역시 주월동 거주 주민 서영식 씨(93세)는(☎010-7510-2000) 양변기 절수장치를 개발한 발명으로 물통의 20% 물만 사용해서 전량 물의 배설 효과를 내는 확실한 양변기 절수장치 발명으로 발명 특허를 획득하고, 양변기 절수장치를 보급하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물 절약에 관한 관심이 없으며 양변기 절수장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물 절약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물 절약에 대한 후보들의 관심이 없으며 공약도 없다.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앞으로 기업이 사용할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캠페인의 RE100 시책에 대해 그 단어조차도 모른 후보가 있어 한심스럽다.

물 부족국가의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후보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선된 지자체 단체장이나 대통령의 임기 동안 세계는 비약적인 기후 변화가 있을 것인데 후보들은 RE100 시책에 대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물 절약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선거기간 동안 물 절약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물은 적은 물이 모여 많은 물이 된다. 따라서 물 절약은 적은 물부터 절약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각 가정의 화장실에서 절약되는 물이 전국적으로 모이면 큰 물이 되고 이것은 수자원 절약과 수도료가 절감된다. 역사적으로 현명한 통치자는 치산치수 사업을 잘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 부족 국가의 대책을 서둘러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칼럼

서해수호의 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국민 방파제 역할 다짐

기고

김정수 완도해양경찰서장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일상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져 따스한 기온과는 달리 마음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봄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평화롭던 봄날,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서해를 책임지던 천안함 탐승 해군 장병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46명이 사망하고, 구조작업을 하던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충적이 가시기도 전 그 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피격 받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주 금요일로,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타국의 위협에 맞서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주권을 지켜 내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도 ‘서해수호의 날’은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 3005함 근무 중, 인천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 검색을 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故이청호 경사를 포함, 여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양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 국민의 안전망 역할

기고

이선진 나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겸

부처도 다르고 그에 따른 신고 전화번호도 다양하게 존재해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신고 전화번호들을 다 외우고 활용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또한 주변에서 얘기치 못한 긴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막막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긴급신고 통합서비스는 21개의 긴급 신고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6년부터 범죄신고(112), 재난신고(119), 민원상담(110)을 3개 번호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첫째, 긴급신고 전화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전화 번호, 사고 위치 등의 신고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시스템상에서 신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고 정보가 관련 부처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실시간 공유체제가 유지되어 신고 이관 소요시간이 통합서비스 이전(16년 6월 기준)에 기존 평균 2분 49초 걸리던 것이 20년도에는 1분 40초로 69초(41%)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경찰·소방·해경이 함께 공동대응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 출동지령 소요시간이 평균 7분 46초(16년 6월 기준)에서 20년도에는 평균 4분 3초가



걸려 이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인 3분43초(48%) 가량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긴급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단순민원 전화는 비긴급성 전화인 110번으로 이첩하여 본연의 긴급상황을 처리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넷째, 긴급신고 공동대응 신고 유형 중 구급, 구조, 화재, 교통 분야에서 긴급 대응 시간 1분 단축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5년간 약 895억 원의 국민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각종 범죄 및 재난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범죄신고 112, 긴급재난신고 119, 민원상담 110만 기억하면 위급 상황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긴급신고전화통합 서비스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되고 있다.

반면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거짓신고는 절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구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small>		
<small>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